

혁신당, 합당 당원 투표 시사…협상 전권 조국 대표에 위임

비공개 당무위…“민주 당명 유지 발언, 흡수 통합 전제한 듯 유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시사했다.

26일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격렬한 찬반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당무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당의 독자적인 비전, 가치, 정책이 기초해 당원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협의에 대한 전권은 당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합당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당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결정한 뒤 그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잔성·반대 식의 논의가 아니었다. 민주당에서 여러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제안을 썼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부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제안으로 ‘당이 너무 많이 휘둘러서는 안 된다’, ‘당 대표 중심으로 질서 있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에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의 전날 기자회견발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이 합당 시 당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을 두고는 “흡수 합

당을 전제로 한 듯한 발언”이라며 “합당 논의를 제 안한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 사무총장이 ‘늦어도 두 달 내로 (합당 논의)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타임 라인을 민주당 사무총장께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 시한에 저희가 구애받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런 언급은 (민주당 측의)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법안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 등 개혁 성향의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혁신당 DNA’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따른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합당 등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서는 공개 발언을 삼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 비서실장이 이끄는 방산특사단은 이날 출국해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60조 잠수함 잡는다…‘방산 특사’ 강훈식 캐나다행

한국·독일로 수주 대상 압축…“산업·안보협력 확대 정부 의지 전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특히 총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조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일정의 목표다. 강 실장 외에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특사단으로 동행한다.

수주전에 뛰어난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기업 관계들자도 함께 캐나다를 향한다.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자리가 주어지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실장은 “현재 해당 잠수함 사업의 수주 대상이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일은 제조업 강국인 데다 우리에게도 잠수함 개발 기술을 전수할 나라도.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부터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방산 사업은 무기의 성능이나 개별기업의 역량만을 앞세워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산업·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직접 전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

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주 캐나다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달해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방문에 앞서 강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전날 전장기념관을 찾아 캐나다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후에는 노르웨이를 찾아 방산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노르웨이에도 이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친서를 전달한 바가 있다. 머지않은 시간에 (방산 협력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협력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막 오른 6·3 지선 ‘120일 열전’ 돌입

다음 달 3일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광역·기초의원 등 3월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월 3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한 치열한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2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내달 3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으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비당원 확인서’와 함께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 기탁금(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청년과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이나 장애인은 기탁금의 50%(50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70%(7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도록 문턱을 낮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을 내걸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어깨띠 및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관할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공약집을 발간해 방문 판매를 제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설립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일반 유권자 역시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말이나 전화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임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 교육감이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지만, 사직할 필요는 없다.

한편,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

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통각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찰법’이라고 반발했으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A 보험GA협회
보험사기예방대응지원센터